

[2003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 빈곤과 차별의 확산

---

[기조발제] DJ-노무현,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송강현주(사회진보연대)	... 1
[보론] 재생산의 위기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	... 11
[패널발제] 전국학생연대회의	... 14

---

일시 : 2003년 3월 3일 6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여성노동권팀),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전국학생연대회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DJ·노무현,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송강현주(사회진보연대)

\* \* \*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시장에서 기업이 해야 할 절대명제이다.”

- 제너럴 모터스 존 스미스 회장

“코닥의 많은 고객은 여성이다. 여성 고객이 많다면 고객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고 고객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코닥 전직 회장 겸 CEO, 조지 피셔

지난 10월, 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토론회<sup>1)</sup>에 노동부 고용평등국 신명 국장이 내놓은 토론문 앞뒷면에는 위풍당당한 문체로 위의 글귀가 붙어 있었다. 전체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노동부, 더욱이 고용평등국 국장이 토론문 앞에 이와 같은 글을 붙여놓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명언(?)’의 나열로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본인의 여성노동정책의 신념과 더불어 김대중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의 입장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세계화에 전위기구인 세계은행이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각 국에 여성인력활용 확대를 권장했던 것을 상기해볼 때, DJ정권으로부터 현재의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이 이것과 어떻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어진다. 성주류화 전략에 따른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등의 불안정 노동의 형태이고, 여성고학력 인력의 실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러난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이제 막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여성친화적”이며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 성평등한 관점을 수립하고 있다는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으로 표기)을 비롯한 한국사회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은 견제와 저항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폐기하고 이 정권들과 연대 및 협력하는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이 글에서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이 결코 여성친화적이거나 성평등한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은 이들이 추진해왔고 또 추진해갈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방향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활용의 요구가 어디로부터 더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지점들 속에서 밝혀질 것이다.

## I. 김대중·노무현 여성정책의 이념적 배경

### I-1. 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여성정책의 변화

1) 「모성보호 제도 사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2.10.29

지난 5년 동안의 김대중 정권의 활약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의 권고를 따라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제의 달성은 한국사회를 초민족적 투기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자본유치형 국가'로 바꾸어 놓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 계급·계층간의 빈부 격차 확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의 빈곤 심화 등을 야기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던 초기, 여성들은 위기에 처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불안의 안전판 역할을 강요당하며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여성들을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대거 흡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현재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다시금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현상은 여성들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으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전략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요구가 없었다면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일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해온 김대중 정권이 여성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친여성적 정권, 혹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실현으로 보기에 여러 혐의점이 노정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자본유치형 국가로 남한을 탈바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과제는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이다. 노무현은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선거전 당시 애매모호한 수사로 얼버무리던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보다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향후 김대중 정권과 동일한 기조 위에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구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경제의 기본 틀도 유지하되 노사관계에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OECD등이 권고했던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sup>3)</sup>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재벌개혁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에 천착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재벌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확고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로 포장한 노동관련 정책들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전략을 감추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노무현의 발언은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2) 97년 경제위기 직후 일시적 하락은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늘고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남성과 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증가가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02년 9월 현재 여성 취업자의 34.8%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 역시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여성은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97년 늘어난 임금노동자 가운데 남성은 64.4%가 상용직이었으나, 여성은 39.3%만 상용직이었다.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란 기업 활동이나 경영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주주권, 이익률, 회계기준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 사원 개인의 자기 책임, 노동시장 유연성 등과 같은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이나 이념·시스템을 통틀어 요약한 세계표준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메리카 초국적 자본의 스탠더드’의 다른 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스탠더드, 사회적 합의주의, 외자유치에 종속된 노동권”,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 1·2월호)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제도화,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좀더 저항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을 '합법적·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성향은 선거 기간 동안 향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외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설치는 필요하지만 노동권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벌써부터 "의료과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에서 더욱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 개혁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김대중 정권 때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성주류화 전략에 무작정 환영만 할 수 없다. 얼마 전 발표된 새 내각에는 여성장관이 과거에 전례없이 무려 4명이나 등용되었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국정영역에 여성이 등용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정권이 어떠한 의도로 행하든, 오랫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성평등한 사회, 혹은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를 이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성주류화 전략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간과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여성의 힘을 강화하고 평등을 이루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신화(神話)를 유포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시장이 결코 젠더 중립적(gender-neutral)인 공간이 아님을 상기할 때, 여성정책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띄게 되는 배경에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도 한몫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릴 때, 현재 주류 여성운동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정권의 파트너로서 자신을 위치지우는 현실 앞에서, 작금의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비판이 요구된다.

## I-2. DJ·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의 본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과 노무현 양대 정권이 여성친화적이라 규정되고 혹은 기대되어지는 것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이하 성주류화로 표기)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여성이 처한 전반적 현실의 개혁 혹은 개선을 가져오기보다는 노동시장 진입, 사회 공직에의 접근에 국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들의 요구에 앞서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사활적인 과제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는다.<sup>4)</sup>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신자유주의적 정권들이 실행하게 되는 배경에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조류<sup>1)</sup>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sup>2)</sup>의 일환으로 도출되어진 측면을 봐야 할 것이다.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정책의 기본적 접근으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였다. 베이징 대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남녀간의 평등에 근거한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추구할 것"<sup>5)</sup>을 공식 선언하며, 이를 위한 행동 강령(일명 '북경행동강령'으로 칭해짐)으로 젠더 주류화 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강령 이전까지 성평등 전략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배제된 결과라고 보고, 여성

4)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 제170호.

5)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선언·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1995

들을 공적 영역에 통합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 및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접근법(Women in Development, WID접근), 여성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접근법 등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성을 생산자라기보다는 어머니,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간주하며 재생산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복지적인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복지지원은 생산자와 재생산자의 이중부담을 다소간 덜어줄 순 있을지언정,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 이러한 성별분업이 사회적 생산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또한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간과하고 이것의 원인을 개별 여성에게 전가하며 생산활동에만 국한된 '진입' 그 자체를 위한 여성인력활용 전략에 초점을 둘 뿐, 여성에게 부과된 재생산 활동을 간과하고 갔다.

1980년대 많은 발전도상국들이 실시한 구조조정 정책이 구조조정의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시켜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강화시키는 상황이 야기되자,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만을 강조하던 WID접근은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이후 열린 베이징 대회는 발전과정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GAD(gender & Development)적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가 제출되게 된다.<sup>6)</sup>

이로서 여성정책이 WID 접근에서 불평등한 구조자체를 문제시하는 GAD 접근으로 이동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기구들과 각각의 개별 국가들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여전히 WID 접근을 지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확대·강화하는 세계 금융기구들의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일례로 세계은행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속적인 불평등이 사회의 생산성을 제약하고, 결국 발전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젠더 평등을 촉진하여 그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국에 성 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 평등을 효율성에 근거짓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산적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실패를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에만 한정짓는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서 성 평등의 추구는 성차를 극복하기보다는 다시금 성차를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귀결시킨다.

어쨌거나 여성들에게 있어 고용기회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가내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가구 내에서의 종속적인 지위를 작업장으로 가져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종 분리를 계속 유지시킨다. 결국 현재와 같은 성주류화 전략은 여성의 일, 피부양자라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 규범들에 대한 도전과 변화추구가 없는 시장 영역에서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젠더 위계를 허무는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한편, 젠더 평등 관점을 수립하도록 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1980년대에 실시된 구조조정이 초래한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각은 재생산과 관련하여, 그리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고려되어지며 “생산성을 증대하고 더욱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women)'가 중요하다는 입장들이 제출되었고, 이를 빠르게 흡수한 세계은행은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 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World Bank, 1995)

한국 사회에도 출산율의 하락,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현상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금 강조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출산율<sup>7)</sup>은 1.3명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이라는 출산율에 훨씬

6) “만일 여성들이 발전정책의 틀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발전에 초래될 부정적인 귀결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의 우선순위를 발전의제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Kabeer Naila(1994), *Reversed Realities: Gender Hierarchies in Development Thought*, Verso

7) 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

센 미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면 2075년에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상품생산'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수행되는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를 부여받는다. 성주류화 전략이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적어도 우리 사회에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바로 이런 현실을 확연히 드러내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성주류화라는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급진적인 조류를 신자유주의적 개편과정 속에 잘 통합함으로써 외관상으로 여성친화적이며 성 평등한 정책을 펼치는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한국사회 성별 분업과 노동에서의 성별 위계,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화 경향, 여전히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단지 이것이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한해 수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된 데에는 1970년대부터 부상한 페미니즘 운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은 단지 작업장뿐 아니라 공적·사적 생활영역 모두에서 남녀 불평등이라는 쟁점을 제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에 각각의 민족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성주류화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전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성과로 돌릴 수 없는 신자유주의로의 세계경제의 재편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동등한 노동기회를 부여하는 성평등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비용지출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비공식화, 불안정화를 통해 두 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등한 노동기회 부여에만 초점을 맞추어 성차별적 지침들을 폐기하는 성평등 전략은 결코 신자유주의 기획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로 성주류화전략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성주류화전략을 자본의 이해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적 기획에 저항하고 성 불평등의 구조적 모순을 철폐하는 전술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성주류화 전략이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결코 자본과 정권의 손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여성의 세력화, 조직화를 통한 여성 저항주체 형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II. 현 여성정책을 통해 본 성주류화 전략의 본질과 한계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민(김대중)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노무현)로 이어지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라는 거창한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일관된 맥락 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한 주류 여성운동진영의 대환영을 받으며 출범한 여성부는 김대중 정권이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가장 성과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여성정책이 친여성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발전전략, 즉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극복하자는 기치하에 진행된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부와 그들이 추진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듯 하다.

### II-1. 여성인력 활용방안으로서의 남녀고용평등 정책

2002년 12월 여성부가 제출한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8)<sup>8)</sup>은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기본 정책목표로 하며 '남녀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직장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 노무현 정권이 선거 당시 제출하고 또 현재 진행하려는 여성정책<sup>9)</sup>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여성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여성집중 직종의 증가, 출산을 저하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여성인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점점 중요 요건이 되어 가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가족부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이 직장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내용이다.

여성인력 활용은 크게 두 축으로 이분화되어 진행된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위한 고급-엘리트 여성인력<sup>11)</sup>과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집단(pool)으로서 기혼여성 노동력(특히 전업주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집단으로 인식된다)의 활용이다.

먼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정책에서 여성정보화 능력 제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주부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공공부문에 여성참여 확대 등은 교수,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상위 계층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다. 구체적 사업에서 살펴보면, 정부 출연. 투자기관의 경우 직원채용. 승진 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승진 등이 극히 낮은 직군, 직종에 대해 우선 목표제를 실시하고,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규여성 연구원 채용비율을 2010년까지 2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목표제를 실시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 여성 IT전문교육의 경우는 대도시 중심으로 일정정도의 IT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고, 여성과학인력의 채용목표제나 여교수 채용확대, 민간 대기업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국제인턴 선발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 지원, 중산층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재취업 교육 등은 이미 일정정도의 지위와 안정적 생활수준을 가진 이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출산휴가 연장을 고용보험 가입 여성으로 제한했듯이 여전히 중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성고용구조의 주요 특징은 특정 직종 '여성 집중 현상'과 '여성의 비정규직화'이다. 일반적으로 여

8)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성과를 계승, 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 간 여성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그 내용에 있어 1차와 큰 차이가 없다.

9) 1.보육의 공공성 확대 2.여성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남녀고용평등 실현 4.대표성 제고 5.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강화 7.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여성의 복지증진 9.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양성평등문화 11.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여성부 역할 제고

10)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자본 및 개별 민족국가의 요구이자 동시에 세계화 기구들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11) 현재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이 들고 나온 '동북아 중심지'는 초민족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남한의 적응책이다. 이는 중국을 고려한 남한의 전략적 선택이다. 조세감면/토지임대과 같은 방식으로 남한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개혁, 여성고급인력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및 자녀출산기인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그 형태가 M-type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15~59)의 연령별 분포는 점차 M에서 역 U자형으로 변화<sup>12)</sup>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참가의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팽창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3차 산업의 팽창은 서비스업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여성의 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3차 서비스 업종의 고용은 주로 시간제 고용이나 임시 고용 형태<sup>13)</sup>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새로 창출된 제조업 직종의 경우에도 전일제 직업은 기혼여성들만 할 것 같은 시간제 직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의 여성화-노동의 불안정화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활용·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전략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고용이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있다.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와 육아휴직제도활성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와 여성고용으로 인한 기업부담완화,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고용안정센터 내에 시간제근로를 특화해 알선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시간제 근로의 풀을 확보해 구인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다. 이미 IMF이후 파트타임,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여성부와 함께 노동-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란 기치 하에 불안정 노동을 강제하는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용의 형태와 더불어 내용도 문제가 된다. 인수위에 보낸 여성연합의 여성정책 제안서는 여성일자리 창출에서 주로 지역 사회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 직종 개발 및 대폭 지원을 통한 고용시스템 안정화, 재가 복지서비스도우미 확대, 장애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복지분야 고용확대,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분야 고용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추구보다는 사회적 재생산 분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부차적인 것에 두는 성별 노동분업 구조자체를 계속 유지 강화하는 문제로 남는다.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출생률 저하라는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라는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이미 신규 고용은 대다수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확대시키려는 고용의 내용 또한 가사 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구조조정 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온 여성 직종화와 성별분업이 재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모성보호,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혼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사출산양육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직장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모성보호, 보육의 문제 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계기이다. 모성보호와 보육의 사회화는 당장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출산율 저하를 막는 방책이 될 수 있으므로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일례로 2000년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sup>14)</sup> 그러나 그 혜택은 여성노동자 그 중에

12) 한국여성개발원,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

13)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3차 산업으로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새로운 직업들이 시간제나 임시직이었다. 82~86년 사이 13만명의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잃은 반면 같은 시기 45만개의 시간제 직업이 창출되었다.

14) 모성보호법에 따른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는 임신부의 야근 및 휴일 근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산전후 휴가제 등이 취업 규칙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전 후 휴가 급여 수급



서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40% 미만에게만 한정된다. 심지어 노동법 개악과정에서 모성보호 미명 하에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 철폐되었다. 이는 다시 대다수 취약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는 가족을 통제, 조절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족의 능력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때문에 보육, 모성휴가와 같은 정책은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자층으로 노동시장에 유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적 기획이 될 수밖에 없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5대 생활문화 개선<sup>15)</sup> 등의 의식고양 사업들도 어머니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성의 보조적 위치를 부각시키는 방식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다.<sup>16)</sup>

## II-2. 복지정책 :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계승된 한계점들

DJ의 '생산적 복지'는 결국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생산적 복지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상은 '취업노동을 하는 자'이며 이는 가정의 일이 우선적인 임무로 부과된 여성 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소외시키는 복지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의 축소는 여성들에게 재생산 노동의 책임을 더욱 떠맡기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의 하락 속에서 가계 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다시금 임금노동에 진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의 부담을 떠안을 때에만 여성들은 비로소 생산적 복지의 수혜자 범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sup>17)</sup>

새로이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생산적 복지의 리모델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배제된 자들의 불만 관리를 위해 하향평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생존권적 수준까지의 기초적 보장에 한정하고, 노동력재생산의 사회화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sup>18)</sup>. 기초법 등을 통해서 극빈층의 여성을 최소한 수준으로 관리<sup>19)</sup>하고, 대다수 다른 여성정책들은 중산층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이것들도 모두 시장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에도 이

---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직장가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연월차 휴가 잔여일수를 우선 사용하는 방법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가사휴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 보육시설 부지확보 및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 '살림! 엄마아빠 함께 하면 자녀에겐 교육입니다' '명절연휴, 아내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 아빠가 참여하면 기쁨도 두 배' '아빠 관심받은 아이 엄마교육 열매 효과' '회식은 가볍게 술자리는 강요 없이'

16)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 제170호.

17) 하지만 이것 또한 결코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적 한계때문에 그러하다.

18) 90년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일본형 신자유주의 복지구상'이란 이름으로 1995년 7월 '사회보장체제의 재구축'이 진행됐다. 복지의 시장화와 생존권 수준의 관리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여성복지 관련 공공부조/자활 부문 정책대상은 주로 극빈층 모자가정 여성이다.

것이 시장영역으로 떠넘겨지고, 다른 한 편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성주류화 전략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온 여성부는 이러한 여성의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가의 여성인적자원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계획을 무비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부의 가장 비극적인 지위는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데 있다. 고작해야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재의 위기의 부담을 가족의 책임으로, 가족 생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되 이들이 맡고 있는 재생산 및 가사영역의 일을 일정정도 사회적 차원의 분담으로 무마하려는 일 뿐이다. 현재 여성정책은 '여성이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것인가'하는 것에서는 한발자국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자본의 요구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확대'는 더 이상 급진적인 것이 될 수 없다.

### III. 새로운 여성운동, 성인지적 · 성평등적 사회운동을 조직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으로부터 현재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 오는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종속된 것이다. 현시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거나 성평등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불안정노동자층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이루려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이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진입 욕구와 맞닿으며 여성친화적인 외피로 가려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대됨과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여성들의 발언 공간을 열어주고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폄하할 수만은 없다.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와 현재의 상황을 잠시 비교해보자. 스웨덴은 1970년대 노동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국가적으로 장려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여성노동력을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사회화하는 정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결과 재생산을 둘러싼 권리들과 양육 및 보육의 권리들이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게 되고 이로서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며 이들의 정책이 회자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획에 포함된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여타 다른 여성정책들, 국가 공공정책들이 성인지적(gender perspective)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정책 추진은 성별분업이라는 구조적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는 데는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전세계적인 불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스웨덴의 여성친화적인 정책들은 일차적인 축소·폐지의 대상이 되었으며 점차 진보적 성향들이 폐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지점은 그것이 여성들의 주체적인 세력화의 부재라는 점이다. 여성들이 조직화되어 있거나(스웨덴의 경우 여성조직들은 대체로 관에 의한 조직화는 되어있다), 혹은 여성운동, 사회운동이 구조적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그것의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온 성평등 전략들이 쉽사리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 일고 있는 여성정책의 봄이 단순히 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저항주체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의 성주류화 정책, 여성인력활용정책 등이 성별분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은폐하고,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을 단순히 여성 개개인의 문제로 남겨두며 본질은 가려두고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노동력 활용책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렵사리 생긴 여성부와 같은 조직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생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동원되는 것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 주류 여성운동은 자본의 전략과 호응하며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화'로 변모시켰으며 그 급진성을 탈각시켰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여성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 관행들이 문제제기 되기 시작했다. 또한 운동의 내용에서 성평등을 다른 사회운동 이슈에 부문으로 인식하며 전체 사회운동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들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선의 노력들이 간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활동 작풍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획속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시장의 비공식화·불안정화를 통해 두 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권에 전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운동이 여성의 요구를 부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의 여성적 사고에 기반한 전체운동에 대한 관점과 계획 수립은 사회운동이 운동의 표준 인간형을 삼아온 남성애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람 이 글을 마친다.

# 재생산의 위기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

\* \* \*

## 0. 들어가며

이 글은 새 정권을 맞이해서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밝히는 글은 아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현실의 노동운동이 여성의 문제에 대한 “공백”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재생산의 위기라는 현실에서 자기증식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한 자본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라는 존재를 또 한번 기만하기 시작했고,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많은 방안들을 고민했다. 이것이 그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이었던 것이다.

노동운동 역시 이제껏 고민하지 않은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해 비로소 일천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자기증식의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본이 채택한 여성노동 활용방안에 대해 뚜렷이 반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자본의 여성노동 활용방안과 그동안 여성노동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노동운동이 일정정도 접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운동진영은 가장 손쉬운 방식을 채택했다. 그것은 그동안의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수많은 고민과 요구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자본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여성노동 문제의 고민을 멈춰버린 것이었다.

## 1.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의 공백

그동안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에 대해 거의 고민을 하지 않았다. 6~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속에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왔는가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는가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는 삭감시키는 것 정도로 여성노동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노동운동은 여성노동 문제의 공백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지난 해 주5일제 문제의 경우에서도 알수 있다. 주5일제가 당장에 비정규직화된 여성노동력을 고려할 수도 없음을, 또 주5일제로 인해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여성노동력이 더 많은 재생산 노동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문제의 심각함이 고려되지 않았다.

여성노동자의 투쟁  
87년 2월 20일

또한 노동운동은 그동안 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작동되어왔던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여성의 사회적 노동 권리를 부정하는 구실로 작용했었다.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소수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을 가정에 머물게 하고 전통적 성별분업의 관념을 재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해왔는데 이로서 여성의 노동력을 유희노동력으로 규정하는 일반적 가정이 정당화되었는데, 이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노동운동 내에서도 비판의 여과없이 오랫동안 작동되었던 것이다.

## 2. 노동운동의 코포라티즘적 맥락

그렇다면 여성노동의 “공백”을 내실있게 채우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노동운동의 여성노동 문제의 인식과 노동운동의 현재 방향이 일정정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의 노동운동이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것에 있는데, 이는 단지 노동운동에 참여여부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의 맥락속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체로서의 뚜렷한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깔려있는 실리주의적 경향을 말하는데, 실리주의의 핵심은 교섭력 확보를 위한 조직력의 배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운동의 여성노동력의 활용의도 역시 조직력의 확보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본이 위기를 수용하기 위해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듯이 노동운동 역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자본에 맞서기 위한 의도로 자본과 다투어 버린 꼴이 된 것이다. 문제는 조직력을 키우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력의 확보가 실질적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배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실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그 의도의 불순함에 있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노동의 문제는 노동운동내에서 부문적인 요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노동운동에서는 여성노동력이 부차적인 그러나 활용 가능한 자원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운동에서의 “공백”을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 3.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실 선불리 많은 대안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노동운동의 그동안의 공백은 단지 “공백”이었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동안의 여성노동자들의 발언과 권리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숨죽이게 한 점에서도 심각한 점을 내포한다. 결국 노동운동은 다시 이 문제의 고민을 원점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아직 주체도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제의 심각함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원점에서 이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여성노동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재생산의 사회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은 사실 무척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에 있어서는 재생산의 사회화가 더욱 어렵게 놓여진 것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재생산의 사회화에 대한 시각에 있다. 예를 들어 세탁기나 전자렌지 등과 같은 ‘자본화’의 방식이나, 모성보호·보육법 등의 ‘제도화’의 방식이 재생산의 사회화를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높은 재생산 노동의 기준치를 부과하고, 온전히 재생산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여성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구조이기때문에 올바른 의미에서 재생산의 사회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여성노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방식만이 아니라 더 알찬 실내용으로 조직화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노동력을 조직할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의 실내용이 더더욱 많이 고민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노조 페미니즘이 요구로 내놓았던 ‘150시간 교육시간 쟁취’와 같은 문제의식은 우리의 노동운동에서도 적극 고민해야할 바를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시기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의 구조로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동운동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여성노동의 문제가 노동운동의 보편적인 과제로 인식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고민의 방향을 다시금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고, 운동진영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재생산의 위기에 맞서 신자유주의 반대!!  
여성의 이중부담 반대!! 여성권 쟁취!!를 위한  
3.8세계 여성의 날을 만들어갑시다.**

전 국 학 생 연 대 회 의

\* \* \*

0. 들어가며; 38 세계 여성의 날의 현재적 의미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당과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8년 3월 8일, 루저스 광장에 모인 1만 5천여 명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은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임금을 인상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며,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며, 절규를 토해내었습니다. 무장한 군대에 맞서 복종과 체념을 벗고 일어난 인간으로써의, 노동자로서의 피맺힌 절규는 전 의류노동자의 총파업을 낳았고, 마침내 1910년 여성노동자들은 이 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정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3월 8일은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모든 여성들이 하나되는 연대의 날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003년, 이 땅의 여성은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폭력 속에서 다시금 95년 전의 여성들간의 힘찬 저항과 연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위기극복 전략은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모든 부담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성을 직장에서 내몰았던 구조조정의 칼바람.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와, 공적 서비스 축소에 따른 가계유지비용의 급증은, 여성들을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돌아온 여성을 반기는 것은 여전히도, 산더미처럼 쌓인 가사일.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여성들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부문의 직종을 선택하도록 강제되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는 여성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재생산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이중부담의 강화 속에서 여성의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는 가속화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몰고온 노동의 불안정화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킵니다.

이는 지난 시기 김대중 정부를 통해 더욱 호도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리 신장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와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하 진행된 구조조정이 심화시킨 노동의 불안

정화와 가족의 위기는 이러한 여성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여성부의 정책방향은 여성이 구조적으로 억압, 배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은폐하면서 빈곤의 여성화라는 맥락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여성의 자기능력개발 부족인양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정책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 임금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여성정책에 있어서 기간 여성운동이 투쟁해온 정책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이 현재 신자유주의를 정점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여성부의 출범 이후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여성부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위기비용의 전가에 노출된 여성의 문제를 폭로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들간의 저항과 연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여성의 문제가 제도화된 틀로 수렴되는 경향에 대해 견제하면서 이러한 수렴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여성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3년 세계 여성의 날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여성 공동의 목소리로 풀어가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간 학생운동진영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선행한 후, 2003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신자유주의 위기극복 전략이 강제하는 이중부담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마저 파괴당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폭로하고, 여성의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 1. 봉기와 우애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여성권'

'여성주의' 혹은 '여성주의 학생회'라는 용어가 학생사회에서 회자된 지 몇 해가 되어간다. 그동안 이러한 여성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학생사회 내에서 광범위한 반성폭력 운동과 함께 여성 노동권에 대한 옹호 등으로 다양한 실천과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각종 활동에서 반성폭력 내부규약 제정운동 및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여성배제적이지 않고 여/남의 차이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활동은 단순히 활동에 있어서의 여/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와 문제에 대한 고민과 발언을 통해 이를 대중정치활동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권리로 구성해가기 위한 투쟁과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위치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간의 여성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실천들이 현재 대중운동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올곧은 성과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성폭력이나 여성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 속에서 심화·확장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주의'등으로 제기되는 여성과 관련한 활동들이 명확한 이해 및 상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채, 활동의 의미와 목표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며 진행되는 것 역시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하기에 우리는 기간 여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문제의식과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위상을 재확인하는 과정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3년,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혁명의 원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유효한 쟁점의 발굴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실천의 모색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운동 단위들, 대중단위들과의 공동의 논의를 통해 쟁점을 발굴하고 이를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생생한 실천으로 구성해가는 과

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여성권’을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사고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성해방운동이 여성정치, 여성문화의 특수성을 부르주아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방어적인 ‘동일성의 정치’를 넘어서 성적 차이의 윤리에 근거한 정치의 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성권이라는 문제의식의 기본적인 방향은 ‘여성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통칭 역사적 가부장제/역사적 자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여성 억압적 기제들을 철폐해 나가기 위한 고유한 실천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이가 인정되는 연대성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보편성의 창조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이를 통칭 ‘여성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여성권’은 두가지 극단, 즉 평등주의-기존의 동일성에 통합시키는 것, 따라서 ‘여성권’이라는 독자적 개념은 불필요하고 기존의 정치적 권리를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와 본질주의-따라서 어떤 ‘분리주의’-사이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여성권’의 범주가 갖는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이 처해있는 ‘내부적 배제’라는 역설적 조건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왜 그것이 해방과 변혁을 안아오는 데에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내부적 배제는, 그것이 없으면 특정한 구조가 재생산될 수 없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면서, 이 구조의 ‘총체성’을 전복함으로써 그것의 근본적인 갈등-적대-으로 기능하는 역설적 요소를 구조의 지속을 위해서 원자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은 내부적 배제와 관련한 가장 탁월한 사례인데, 그 까닭은 여성이 (자본주의)체계의 ‘사회적 재생산’-또한 그 보편성뿐만 아니라 공/사 구별을 상징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제도인 ‘가족’-을 지지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여성이라는 동일성에 입각하여-조직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 해체되고, 뒤이어 공동체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들은 여성들의 말과 욕망의 이중적인 부정을-섹스와 재생산에 묶인, 순수하게 종족적 본질이나 운명과 함께 여자들을 귀속시키는 한편으로, 그녀들을 이상적 여성성의 원형에 따라 평가하면서-실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적 배제는 오늘날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 헤게모니에 의해 제도화된 사회적 재생산 및 그것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재생산 형태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미 헤게모니 하의 사회적 재생산은, 한편으로 ‘가족임금’-및 그것을 보조하는 ‘복지국가’-, 다른 한편으로 ‘핵가족’-특히 ‘스위트 홈’이데올로기-의 형태를 취했는데, 미 헤게모니의 위기와 함께 사회적 재생산의 조건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노동의 여성화’<sup>21)</sup>가, 후자와 관련하여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는데, 전자의 측면에서 여성은 일정한 기회를 획득하는 반면 후자의 측면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은 여성들 간의 갈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좀더 완전히 하기 위해서 여성은 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은 배우자와 가사노동의 문제를 분담하거나 가사노동을 노동자계급 여성-가정부 등-에게 전가하는 방식 이외에는 없는 바, 따라서 이는 물론 노동자계급 여성에게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헤게모니 하에 제도화된 사회적 재생산에 조용하였던 ‘제2세대 페미니즘’은 위기에 빠진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핵가족 및 그것에 조용하는 ‘스위트 홈’ 이데올로기의 해체 역시 가속화된다. 그것에 본래적인 내적 모순이 노동의 여성화-따라서 여성의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와 빈곤의 여성화-여성의 ‘압축할 수 없는 최소’에 대한 침해-에 의해 과잉결정되면서, 핵가족의 붕괴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2세대 페미니즘’이 제기한 ‘성적 자율성’이라는 쟁점 역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적 자율성이 노동의 여성화/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리면서, 노동조건에 하향평준화 및

20) ‘사회적 재생산’은 단지 그 사회성원들의 생물학적 재생산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모든 (경제)체계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그러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인구의 사회적 재생산과정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자본주의는 특히 이들간의 분리 및 그것의 비가시화를 특징으로 한다.

21) 이것은 한편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의 증가일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저임금, 주변적 업무라는 이전의 여성적 노동의 특성이 남성적 일자리에 적용되는 것, 즉 노동기준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책임 전가를 정당화하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성권은 여성의 '비시민'이라는 문제들에서 발전되어 온 공/사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문제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적인 문제'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보편적 권리의 해체에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압축할 수 없는 최소'를 다시 공적인 권리로 발명해 내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정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경계를 비가역적으로 확장시켜낸다. 이렇게 볼 때 '여성권'은 단순히 '여성들의 권리'라는 정도의 함의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관건적인 문제이며, 결국 여성에 대한 '환대'는 봉기와 우애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 2. '재생산의 위기'의 틀로 재구성하는 '여성권'

이상과 같이 우리는 기간 제기된 여성주의와 여성권의 의미를 재정식화해 보았다. 기간 이러한 여성권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실천이 반성폭력과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과 실천은 일정부분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편적인 권리로서 여성의 권리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편향과 함께 일정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을 경과하며 이러한 쟁점이 시효를 다하거나 뚜렷한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함에 따라 기간의 실험과 실천은 담보상태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틀 바탕으로 하여 2003년,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혁명의 원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유효한 쟁점을 모색하는 일이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2003년 이땅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여성억압의 문제를 재설정해 보도록 하자.

현재 미 헤게모니의 위기와 함께 사회적 재생산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를 필연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 헤게모니 하에 제도화된 사회적 재생산에 조응하였던 '제2세대 페미니즘' 역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여성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떠한 방향으로 재설정될 것이며, 또한 대중운동은 어떠한 다양한 실천과 실험을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을 구하는 작업은 재생산의 문제설정을 통한 여성억압의 문제의 재설정 작업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 3. 신자유주의 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 - 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최근 각종 자료와 통계수치에서 우리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36%에서 1980 42.8%로 증가하였고 1998년 47.0%를 거쳐 2001년에는 49.0%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수치를 놓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노동자의 52.3%가 비정규직이고, 이중 70.2%가 여성으로 대부분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산부문을 파괴하고 금융적 팽창을 추구하는 자본운동의 현재 경향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대대적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근래에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성들보다 더 싸고 더 유연하며 집단적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의 고용을 선택한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노동의 여성화'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대부분이 가정 안에 묶여있던 과거에 비해 밖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일어났지만 역사적으로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대부분의 여성은 여전히도 가사노동과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부문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생산직·사무직·판매/서비스직에 몰려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의 여성화는 결국 그녀들의 신세를 가정의 안과 밖에서의 이중적 착취로 남겨놓았을 뿐이다.

또한 노동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고용 증가 외에 과거 여성 고용의 특징이었던 조건이 모든 산업의 고용조건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유연한 고용 형태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상적인 것으로 노동 조건 자체의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노동의 여성화-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은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한다. 여성들은 노동의 여성화로 고용의 증가와 생존의 기회를 제공받지만 여전히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을 받아야하는가 하면 불안정한 근로조건과 훈련과 승진 기회의 결여, 유해한 작업환경, 복지 급여의 부재 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녀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되며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화는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여성의 고용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여성은 폭력과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 - 여성을 정점으로 한 악순환, 재생산의 위기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와 함께 노동할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재충전도 역시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8시간 노동, 8시간의 수면, 8시간의 재충전의 안배는 인간의 적정한 노동력을 위한 배분이었다. 고도의 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노동 수행의 능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노동력 재생산의 척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교육의 시기는 더욱 길어졌고, 의식주의 문제도 단지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높은 질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도래한 자본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를 치료책으로 내걸면서 그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로 97년 외환위기로 노동자 계급의 삶의 위기가 증폭되고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이 양산됨에 따라 가계의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국가가 겨우 지탱하던 공적 서비스마저 해체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위기 비용의 민중전가로 인해 가계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급증하였으며 노동자 가족은 '더 많은 가족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늘리고, 무임금 가사노동을 강화하여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존전략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중 특히 여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며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공적 서비스의 해체는 자녀 양육과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 등의 재생산에 관한 가계의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비용 증가를 흡수하기 위해 여성은 자신의 무임금 가사노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는 여성이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남성과는 매우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부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고용은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숙련이 필요 없는 노동으로 여겨져 여성들에게는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 진출은 여성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 생계보충을 위한 노동력의 '출혈판매'일 가능성이 높아, 여성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여성의 역할은 가계 소득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성의 소득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과 사회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족 내에서 의존적이고 이차적인 가장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다시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강화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의 지위를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에서 낮은 여성의 지위는 가족의 소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기여도를 낮춤으로써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확장'이라는 통계지표의 진실은, 여성이 늘어난 가계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기 위해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노동 착취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자로서 여성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노동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사회적 재생산 기반자체의 붕괴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여성의 힘으로 지탱해왔던 재생산노동이 그 임계에 다다르며 위기는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 갇아먹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는 파탄나고, 여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 2.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 평가와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 -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은 2001년 여성부의 출범과 여성정책의 주류화 등으로 인해 김대중 정권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달리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여성부를 중심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총적인 방향성 하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와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김대중 정권이 실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여성의 현실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교체와 IMF 외환위기의 힘으로 정권 초기부터 개혁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한 부르주아지의 정책이자,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비용을 끊임없이 자본으로부터 민중에게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위기 비용의 민중 전가는 가계의 생존 전략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장)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특히 여성) 부족한 소득을 채우기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해오던 여성들 역시 이러한 생존전략 속에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여전히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양육과 병행하기 위해 시간제나 비정규직을 선택하거나, 비공식부문으로 진출하게 된다. 결국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문으로 진출하는 여성노동의 대부분은 여성부가 말하는 것처럼 신축적 근무조건이 좋아서 여성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노동의 책임과 감소한 실질임금을 보충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노동력의 '출혈판매'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출혈판매'는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인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남성들보다 더 싸고 더 유연하며 집단적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의 고용의 증가는 생산비용의 감소라는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과도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녀평등을 이루기보다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본의 요구와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여성의 노동이 증가함에도 여전히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공적서비스의 해체로 인한 재생산 노동의 가계로의 부담은 오히려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더욱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부는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빈곤-여성의 이중부담 강화현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모성보호법이나 양육문제에 대한 여성부의 정책은 여성의 실질 요구나 필요가 결합된 문제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의 파멸적 영향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예컨대 모성보호법 논쟁이 보여주듯이, 여성 일반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을 전제로 수혜의 대상을 한정하여 찬반의 논리를 여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내부화함으로써, 정권은 정책의 실현 범위와 상관없이 정책수립의 효과를 보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양육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도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의 질을 가진 사립 양육시설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양육을 사회화하는 것이 아

나라 '상품화'하는 것으로 (여성부는 현재, 모범 사업양육시설을 공모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또 다시 자신의 출혈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하에 여성의 출혈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역시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의 방향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교체', '개혁적 정치의 승리' 등의 온갖 찬양적인 수사로 평가되는 노무현 당선자는 인수위원회에 소위 '개혁적 세력'을 대거 영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개혁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개혁적' 색채는 여성정책에서도 드러나는데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기간 여성운동이 투쟁해온 정책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선 바로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무현 당선자의 여성정책이 김대중 정권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성의 이중부담을 은폐하고 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의 여성부 출범 이후, 주류 여성운동의 흐름이 여성부와 의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여성부를 중심으로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수렴되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의제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발언의 공간이 열린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성부의 총적인 방향성과 활동이 결국은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부를 통한 사회적 쟁점화는 결코 여성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힘들게 할 것이다. 또한 여성부의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초과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조직되지 못함에 따라 동일화될 수 없는 여성들간의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인 배제와 소외가 발생할 것이다.

### 3.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관계 ← '재생산 사회적 약자'?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의 무임금 재생산노동은 언제나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이 떠안고 있는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성을 극도의 열악한 삶으로 내몰아, 재생산 기반 자체를 파괴하고 이것이 다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생존에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환상 속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은폐할 뿐이다. 재생산노동의 상품화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 자립과 자율성을 약속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대다수 여성들에게 더욱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가져다준다. 여성은 이를 상품으로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출혈노동을 더욱 감수해야 하거나, 가정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재생산 노동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결국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혜의 범위를 한정하는 '생산적 복지' 역시, 결국 여성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아이들과 노인을 돌보는 활동을 요구하며, 다시 여성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임금 노동으로 집중시키고 만다.

따라서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의 위기는 여성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생존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의 노동력을 무한한 것으로 가정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존전략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여성의 재생산 노동의 위기 속에서 종국에는 임계에 다다를 것이다. 적극적인 인식과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 발전과 그 위기대응의 비용을 여성이 감내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 그 속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막대한 부담을 거부

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전체 민중의 보편적인 요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4. 나아가며:

**재생산의 위기에 맞서 신자유주의 분쇄! 여성의 이중부담 반대! 여성권 쟁취!를 위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어나가자!!**

95년 전 울려 퍼진 여성노동자들의 저항과 연대의 함성은 2003년 현재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3월 8일은 단순히 지난 시기 진행된 여성의 투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금 여성 공동의 저항과 연대를 구축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세계 여성의 날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양한 양상에서 폭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 하에서 여성의 권리를 구성해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력의 출혈판매와 재생산 노동의 증가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은 결국 재생산 기반 자체의 위기라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산의 위기 속에서의 여성의 착취양상을 폭로하고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재생산의 위기로 파악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착취 양상을 폭로하고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김대중 정권 이후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자유주의적 폭력과 착취의 악순환을 끊어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생산’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고, 실제 학생운동 내에서 실천적인 쟁점으로 제기되기에는 한계적인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산과 재생산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문제를 여성만의 무엇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보편적인 혁명의 원리로서 여성권을 구성하기 위한 유효한 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여성운동 단위와 대중운동 단위의 자활력을 높이고 각 단위에서의 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실천의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각 단위의 성과가 환류될 경우 더욱 유의미한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을 것이기에 공동의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논의는 각 단위간의 연계구축과 공동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회적인 활동과 계획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초과하여 이를 통해 각 단위의 지속적인 연계를 구축하여 시기별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활동의 성과를 교류할 경우, 이는 각 단위의 자활력은 물론 학생운동 내 여성주의적 실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연계의 구축은 공동의 계획과 실천을 통한 유의미한 여성주의적 실천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재생산의 위기에 맞선 공동의 실천을 계획하여 봅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중심으로 각 단위에서 여성주의적 실천을 진행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여 나가며, 또한 이를 계기로 2003년 여성주의적 실천의 과제를 정선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위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8까지의 공동의 계획과 투쟁을 진행하고 2003년 여성주의적 실천의 공동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실천적인 여성운동의 저항과 연대의 흐름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전략하의 이중부담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마저 파괴당하고 있는 이땅의 여성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만들어갑시다!